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위험 노출 '심각'

이명연 도의원, 법률·노무상담·치유회복 지원 촉구
"복지 종사자들의 우울위험군, 말기암 환자들보다 높아"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절반이 넘는 63.1%가 서비스 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돼 있고, 말기암환자보다 높은 우울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연구책임 윤명숙 교수)가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월 간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3.1%에 달하고, 사회복지사들은 말기암환자들보다 높은 우울위험군(우울 위험군 : 사회복지사 19.2%, 일반인 3.79%, 방문간호사 6.6%, 경찰관 9.5%, 말기암환자 18.7%)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각종 폭력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법률·노무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를 당한 종사자들이 각종 치유·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명연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보장과 인권침해 예방 사업은 물론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사회복지사회하나 2021년 설립 예정인 (가칭)전북도사회복지서비스원에 전문인력과 팀을 배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大本 회의,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종大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원, 서해 특성 연구기관 '無'

민주 이원택 의원 "새만금권역, 서해 해양 연구의 최적지... 반드시 연구기관 설립해야"

세계 4대 해양 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서해의 해양특성을 연구할 거점 연구소가 없고, 서해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어 서해권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각 해양권역에 자리를 잡고 해양환경의 변화와 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와 거점기지 5개소가 있는데, 모두 동해와 남해권역에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해권역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한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해, 남해, 제주권역에는 해양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가 있으나, 서해권역의 해양특성을 연구할 거점 연구소가 없고, 서해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어 서해권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각 해양권역에 자리를 잡고 해양환경의 변화와 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와 거점기지 5개소가 있는데, 모두 동해와 남해권역에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해권역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서해는 세계적인 갯벌과 다양한 해양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라면서 "서해 해양특성연구가 전혀 없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반쪽짜리 연구기관이다"며 "반드시 서해 거점연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인 새만금권역은 서해 해양 연구의 최적지"라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새만금의 수질환경 변화와 서해권 해양특성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반려동물 진료비 천차만별, 진료비 사전 공개 시급"

국주영은 도의원 "자율표시제 시행해야"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반려동물 치료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사전에 진료비를 알 수도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전체 가구의 26.2%에 이르는



501만 가구에서 800만 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주장이다.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는 1회 평균 74,700원을 지출하는데,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진료비는 반려견의 송곳니 발치의 경우 병원별로 5,000원부터 40만원으로 진료비가 최대 80배나 차이가 났고, 반려동물 복부초음파는 병원별로

최대 13.3배, 중성화수술은 최대 5배,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4.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진료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 의원은 도내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 전체 가구의 14%에 이르는 11만 가구에서 2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전북도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위한 도 차원 대책 필요"

나기학 도의원 "전담부서 설치·행정인력 확보를"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이 지난 23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실태조사부터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사업장에 일하기 위해 출국 대기 중이던 예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또 한국에서 고



용계약이 종료돼 귀국을 준비하던 이주자들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인 213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11.6% 감소한 반면, 미등록 체류자는 3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가 18.7%를 차지하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만 집중돼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

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고령화돼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내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력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주노동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전북도청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과 지원을 책임질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인력 확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차원의 실태조사 ▲전라북도 및 14개시군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교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를

이병철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 전주)은 지난 23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대 및 사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990년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2005년 교원도 의무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올해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며, 교육청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3.4%)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1/2 감면 특례를 적용해도 연간 약 52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교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원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어렵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10%로 이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83%로 저조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원부문 장애인 고용이 낮은 이유는 점수미달 및 장애학생을 위한 부족한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유호상 기자

소방청 헬기시물레이터 구축 2년, 활용실적 '전무'

소방청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용 헬기 시물레이터를 제작했지만,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 헬기시물레이터가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범운영과 현장점검에 한정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헬기사고 방지와 소방전문 헬기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소방청 내 헬기시물레이터가 조속히 활용돼야 한다"며 "소방청이 부산지방방공청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내의 명확한 지정점사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규칙의 개정이나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미디어 범람에 학생 보호 교육 필요"

김희수 도의원

"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보선별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은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종합해석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 중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과정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에 미디어 교육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시험과목에 추가하는 등 일찍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고, 지속해서 연구하며 자리를 잡았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위한 상위법도 부재하고, 지자체별로 관심도 달라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만든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희수 의원은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작년과 대비해 전북 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발생수가 2배 증가했다"며 "타 시도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나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효과적인 필수적인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강릉도 의원, 재난 대비·복구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릉구 의원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 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며 이번 건의의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을"

조동용 도의원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2019년 기준 54억7,754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9억5,480만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총 64억3,234만원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에 따르면, "도시의 양적 팽창 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주택유형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비 용자의 경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강연명 의심되면 '1339'로